



##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황수경 | 전 통계청장<sup>편집주</sup>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인 35만 8천 명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28만 6천 명을 기록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했다. 또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초음파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에만 373개 더 설치했고 매년 450개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와 마을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해당 재정 지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 예산·

편집주) 보건복지포럼의 인쇄 일정이 지연되어 인쇄 시점에서의 직함을 사용함. 통계청장님으로 재직 당시에 보건복지통계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보건복지포럼 편집위원회는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임.

기금의 총지출 요구액은 올해 예산(428조 8000억 원)보다 6.8% 늘어난 45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53조 7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8.2%가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이 분야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증가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등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재정 지출 증가와 더불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변화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례는 관련 국가통계의 생산과 이용 실태일 것이다.

통계청에서 승인한 보건복지 분야 통계는 전체 국가승인통계 1092종 중 99종에 해당하는데, 최근 3년(2015. 1.~2018. 6.) 동안 무려 30종의 신규 통계(보건 8종, 복지 22종)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보건복지 분야 통계 이용 건수 증가도 괄목할 만해 2014년 92만 건에서 2017년 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세로 보면 가히 국가통계 분야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대세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통계 생산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통계 수요의 증가에 비해 통계 생산을 위한 인적·제도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전담 인력은 전체 인력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 종수당

투입 인력은 약 0.5명으로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평균 투입 인력 2.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통계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문성이나 통계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통계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나 조사 내용이 민감한 경우 응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려운 데다 조사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보건복지 분야 통계 생산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규모 행정자료인 행복e음을 활용한 통계는 국가승인 통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장애인 현황이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므로 그로부터 축적되는 방대한 행정자료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활용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 분야 통계 중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자체 관리되는 통계가 많다는 점도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법령에 통계 작성이 명시된 보건복지 분야 통계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으로 92종이며, 이 중 미승인통계는 48종에

달한다. 미승인통계는 통계 품질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 신뢰성 측면에서 정부, 학계 등 통계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급증하는 보건복지 수요에 부응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 국가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통계청은 국세청 소득자료, 복지부의 이전소득자료(기초생활급여, 장애인급여, 기초연금 등)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인식이 강하여 자료 보유 기관에서는 전수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올바른 소득 모집단을 구축하여 가구소득 DB의 완전성을 높이려면 관련 부처 간 행정자료의 공유 및 연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둘째,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조사통계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분야 승인통계 99종 중 조사통계가 45종인데 이 중 20종만이 마이크로데이터 DB가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나머지 25종에 대한 DB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일

부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통계는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더욱 폭넓게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승인 통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승인통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나라 보건복지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폭과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통계청, 기획재정부 등 3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된 총 121종의 통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예컨대 사회계층별 건강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이나 환자로서 경험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같은 일부 지표들은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 국제통계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기구 제공 통계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할 통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통계 담당 부서가 더 이상 한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통계 생산 및 활용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쉼길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두어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복지정책 수요의 증가, 관련 재정 지출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더 효율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생산과 활용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제도 정비와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 관련 부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긴밀한 논의와 협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